

통일Focus

‘통일 대박’ 실현방안과 추진과제



박근혜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통일Focu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험, 핵 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또한 1월 22일 개최된 다보스포럼 전체회의 연설에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기반구축 3대 제안」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일부에서는 통일의 필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통일을 미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통일 대박’의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이 ‘대박’인 이유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무엇인지, 통일 대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방안, 그리고 통일 대박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8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장과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통일로 얻는 이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서 ‘대박’

남과 북의 온 민족이 통일혜택 누리게 된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해

▣ 유호열 고려대 교수(사회) :

오늘의 좌담 주제는 ‘통일 대박’ 실현방안과 추진 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통일은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에 관해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통일문제가 실천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2014년 3월 18일(화) 14:00~16:00

▶장소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

▶좌담

- 유호열 고려대 교수(사회)
-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장
-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늘 이 자리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 대박’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통일 대박이라는 언급이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통일 대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주제나 핵심 키워드에 관해서는 전문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먼저,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이신 신창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실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자신감의 표현

■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 :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셨고, 통일로 가는 확실한 길을 확인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표현된 것은 딱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포함된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과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말씀하셨고, 통일은 회피의

“통일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비용보다 실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대박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통일에는 비용과 자금이 소요되지만 이에 비하여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어서 ‘대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선언은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적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구체화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큰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미래비전의 실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의 핵심과업을 해결하는 통일이야말로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은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통일담론에서는 통일을 미래의 일로 생각하면서 현실성에 있어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일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행보라든지, 말씀을 연계해보면 통일이 막연한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일 뿐 아니라 이것을 현실의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화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 회의적인 통일인식에 대해 통일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젠가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이 직접 통일을 만들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대박의 의미는 통일이 우리 민족의 미래와 자산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은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 저는 한 국가의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통일대박의 의미는 통일이 우리 민족의 미래와 자산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이 안보와 경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분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통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살고 있는 남북한 모든 주민의 잠재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항상 안보와 경제를 국가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보아 왔습니다.

또 하나는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정상상의 정상화, 바로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피해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개념으로는 남궁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분단 70년인데 분단 70년이 통일로 가는 원년이 될지 아니면 30년 뒤에 분단 100년을 맞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지, 통일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를 다시한번 재확인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일대박론이 단순한 대박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과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다시한번 재인식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은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성장동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 우리의 성장동력의 부담이었던 북한이 더 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궁영** :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북한 핵문제, 북한의 도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북한주민의 굶주림 등의 문제를 2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각각의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큰 틀로서의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또한,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모두 이룩한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그 돌파구 또한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통일대박의 의미는 한반도에 행복을 확장하는 것

■ **정영태** :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과거에 우리는 생존의 측면에서 ‘잘 살아 보세’ 정책을 추구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하게 살아 보세’라

는 측면에서 행복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보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분단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삶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반도가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구글(Google)에서 소개한 것처럼 밤에 찍은 한반도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보이지 않고 우리 한국만 보입니다. 한반도가 반도가 아닌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나라는 작지만 강한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온 민족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되면 통일은 대박이 될 것입니다. 통일이 대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행복을 확장시킨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구상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해 대통령의 말씀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2015년은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분단국의 아픔을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통일을 강조했다는 점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며 남북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국정기조의 하나로 내세운 평화적인 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대박 구상은 내용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내수가 위축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만성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2~3%대의 저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경제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하고,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한국에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발전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은 정치·군사적인 분단 극복 차원을 넘어서 한국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대박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창민**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박의 의미에 대해 평화와 번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우리만 대박이 아니고 주변국가들에게도 대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국가들도 평화롭고 번영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경제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하고,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 없는 한국에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발전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실을 이해시키고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라는 발언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흐름을 전환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의 천명

▣ **유호열** : 통일대박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대박이라는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등 세계적인 대형 금융회사들이 통일한국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게 된다면, 통일한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동안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통일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통일한국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많은 것은 사실

■ **홍순직** : 그동안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 정도를 정확한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의 시기나 목표달성 수준, 통일 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통일비용의 정의에 대해서도 학자와 연구기관 등에 차이가 납니다.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통일 이전의 대북 지원과 남북 경협, 그리고 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500억 달러에서 5조 달러에 이르기 까지 비용 추정이 천차만별입니다. 무려 100배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성장이 과거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보고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약 1200달러 수준입니다. 참고로 UN에서는 600달러 내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850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1977년에 1000달러 수준이었고, 1987년에 3000달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안정으로
만성적인 리스크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대외 신인
도와 국가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러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려면 약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 정도가 되고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가 됩니다. 약 630억 달러의 통일순편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일연구원 보고(2013년 말)에서는 2030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을 약 3400조원 정도로 보았고, 통일편익은 그 보다 1.8배 정도 많은 63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통일편익이 비용보다 많다는 데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안정으로 만성적인 리스크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대외 신인도와 국가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확대되고 주가와 환율 등이 안정될 것입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해외 차입금리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력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 **유호열** : 그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위험도 감소, 만성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크게 완화될 것

■ **홍순직** : 예. 통일비용은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으로는 대북 SOC 투자 및 북한지역 경제재건 비용이 있고, 최저생계비와 실업수당, 보건의료비 등 위기 관리비용, 그리고 제도통합비용, 인구이동에 따른 혼잡비용 등이 있습니다.

비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이념적인 갈등문제, 소득격차에 따른 혼란과 국민적 갈등 등 사회적인 혼란비용 있습니다.

통일편익을 설명하자면, 우선 국방비와 외교비 등 분단유지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투자로 인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인구 7500만명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과 천연자원 개발 등 생산요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계속된 투자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특히 국가위험도가 감소됨으로써 만성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2013년 우리의 대외 채무가 4100억 달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리스크 프리미엄(해외차입금리)이 0.2%포인트만 하락한다고 하면, 외채 상환 이자 부담이 8억 2000만 달러, 약 870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국가 브랜드 가치와 대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고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관광·문화·학술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신장되고 이산가족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액수가 투입되는 한시적인 지출비용인 반면에 통일편익은 비용 투입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너지 효과와 투자승수효과 등으로 투자비용 이상의 더 많은 편익을 발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통일편익은 투자비용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남궁영** : 향후 수많은 변수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일비용이나 편익을 단정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일비용의 항목과 예상 가능한 편익에 대한 거시적인 플랜을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 **정영태** : 통일비용과 편익을 설명할 때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초기비용과 초기편익, 중간단계의 비용과 편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비용과 편익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센터가 2월 24일 공개한 한반도 위성사진. 불빛이 휘황찬 남한과는 달리 북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득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초기단계에는 비용이 훨씬 높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편익이 훨씬 많을 것이고... 초기에 왜 비용이 더 많은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

5% 투자해서 11% 성장 이루는 것은 그야말로 ‘대박’

■ **신창민** : 통일비용은 통일자금이라 할 수 있는데, 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위기관리비용과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데 소요되는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남북 지역간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10년 기간동안 남한 총소득의 7%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일로부터 얻는 편익은 통일 시점에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과 통일 후 10년의 소득 조정기간에 나타나는 이득, 그리고 그 이후 지속되는 경제성장 내지 경제발전으로 오는 이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일과 함께 즉시 나타나는 이득은 분단비용의 소멸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단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던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비용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액수가 투입되는 한시적인 지출비용인 반면에 통일편익은 비용 투입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통일 이후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는 남한은 매년 11%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북한은 식량 부족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비용과 이득의 실체는 절대 액수로 비교하는 것 보다 GDP 대비 상대적 규모로 비교하는 것이 더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용은 통일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든 통일 이후 10년간은 남한의 GDP 대비 7%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비 절감 부분을 2% 내외로 본다면 실제 비용은 5%가 될 것입니다. 통일 후 10년 동안 5%의 투입으로 11%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 **유호열** :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수치상으로도 대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편익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통일대박’ 이 북한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는데, 박 대통령의 언급이나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통일대박’ 은 북한의 붕괴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과 변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관해 밝혔다. <사진 - 청와대>

■ **홍순직** : 통일대박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데 공감합니다. 통일은 우리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인 북한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은 최근 인민생활 향상이라든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특구도 신설하고 있고, 중국과 EU 등지에 경제 관료들을 파견하여 금융, 회계, 국제상거래 관행, 마케팅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개혁(2012년 6. 28 조치)과 공장기업소 개혁(2012년 12. 1조치) 등을 통해 농업과 공장 · 기업소에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고, 2013년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 제정하고 11월에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북한이 개혁 ·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중, 또는 남·북·러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열** : 앞에서 남궁영 교수께서 과거 20여년 전에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연구활동을 중단했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일부에서도 통일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통일에 소극적이고 무관심 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과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통일비용은 한시적이나 통일편익은 항구적인 것

■ **남궁영** : 저는 통일비용을 수치화 시킬수록 통일 환경을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과정이나 통합에 있어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얼마의 통일비용이 소요된다고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비용은 한시적인 데 비해서 통일편익은 항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투자대비 효율’이 결코 나쁘지 않다

는 점을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붕괴 등 급변사태가 올 경우 엄청난 통일비용이 들 어갈 것이므로 남한은 북한 붕괴를 막아야 한다거나, 통일비용을 줄 이기 위해서 대북 교류협력을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누구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올 경우도 대비해야 하며, 교류협력도 교류협력을 위한 교류협력이 아닌, 통일과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무엇을 위한 교류협력인지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추진돼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안보문제가 해결되고, 7천 500만의 인구와 영국 정도의 국토를 가진 국가가 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이 된다면 동북아 경제협력체,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동북아는 평화와 안정,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통일비용이나 편익을 미시적으로 집계 하기 보다는 이러한 거시적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태** : 통일은 당장 우리 앞에 던져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방식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방식을 설정한 다음에 통일비용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통일비용의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호열** :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무관심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적인 생각은 우려스러운 정도입니다. 이런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생각과 무관심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국민에게 돌아올 이득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

▣ **신창민** : 통일이 되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올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나에게 이런 이득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통일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4월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조직문제 등의 안건을 결정했다.

“통일이 되면 7천 500만의 인구와 영국 정도의 국토를 가진 국가가 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당위성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동안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부분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점점 통일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 **유호열** : 통일이 Bonanza, 대박이라는 사실을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면 무관심했던 국민들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 **남궁영** : 저는 국민들이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진단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일에 무관심하다든지, 통일편익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통일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1%가 통일에 대해 찬성했고 2년 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78%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2012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5.8%였고,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4.4%,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46.1%였음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80%에 가깝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통일에 무관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라기 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적 접근보다는 미래비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홍순직** : 통일과 통일비용에 관한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고 편익이 클 것이라는 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통일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일반 국민의 상당수는 1년에 10만원 내외(월 1만원 내외)로 부담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싫어하는 늪프현상(NOOMP ; Not out of My Pocket)이 존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미국 대사관저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싫어하는 뚱프현상(NOOMP ; Not out of My Pocket)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 연구를 통일편익에서 통일비용을 차감한 ‘순통일편익’ (통일편익-통일비용)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며, 통일 편익에 대한 홍보와 이해 제고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통일편익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소프트한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후 세대와 젊은 층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며, 통일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 확대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 가지게 됩니다. 통일 이전의 드레스덴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은 대표적인 동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이제는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한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분단문화를 통일문화로 바꾸어야 진정한 통일의 가치 찾을 수 있어

■ **전봉근** : 이제는 분단문화와 통일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분단문화에 고착되어 있어서 지금의 상태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을 굳이 보지 않으려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문화를 통일문화로 바꾸어 가면서 진정한 통일의 가치를 찾아

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통일편익과 비교하기 전에 분단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분단상황에 익숙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희생해야 하는 인적 물적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산가족의 아픔, 핵 위협과 전쟁 위험, 북한 리스크로 인한 경제재정적 비용,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사회정치적 비용, 북한으로 인한 군사외교적 비용 등만 하더라도 결코 통일비용에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편익은 이에 더해 순전히 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호열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통일담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대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일교육

문제는 중요합니다. 통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 이후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문제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태** :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남북대화 등 현장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통일대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통일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논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통일을 향한 추진동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도 개선되어야 하고 사회통일교육도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통일교육원도 국가교육기관으로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필수과목으로 강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예산 지원 등 메리트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의식을 결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논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통일을 향한 추진동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통일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통일교육 실시해야

■ **신창민** : 최근의 통일교육을 보면 대체로 안보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체제와 나라를 지키는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너무 강조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지, 어떻게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지, 통일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 후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등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은 남북이 함께 더불어 평화 속에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교육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지만 잘못하면 누더기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 **전봉근** : 통일은 언제 어떤 양상으로 다가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예로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일이 실현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통일한반도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를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비전을 담은 간단한 ‘통일장전’이라든지, 또는 ‘통일

정책 성명'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통일한국의 모습이나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주변국과의 통일외교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일한국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통일외교의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선포하여 주변국들이 이를 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유호열** : 그렇습니다.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합의된 통일교육교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면 통일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한 통일교육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통일실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청와대〉

8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의 통일의지와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통일에 대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어떻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 심어줄 수 있는지, 통일에 대한 친화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신창민** :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통일은 대박이다’는 개념이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한다면 언젠가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주민들의 민심이 남쪽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득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어야 조금 더 친근감을 갖게 되고 남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측면에 보탬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교류협력과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간접자본 차원의 투자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통일이 되면 어차피 가장 먼저 손을 대야할 시설투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의 산림녹화를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북한의 산림녹화가 왜 필요한지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북한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혜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도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단말

“북한주민들의 민심이 남쪽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득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어야 조금 더 친근감을 갖게 되고 남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가 250만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한 외부 정보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북한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대북정책 추진해야

■ **남궁영** : 저는 ‘북한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통일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북한의 변화는 사실상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유형을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폐쇄된 북한 사회에 외부세계의 실상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고 봅니다. 외부세계의 실상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방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0년대 초 서독과 접경면적이 넓었던 동독은

영토의 85%가 서독 TV 가청권이었고 라디오는 100% 청취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동서독 국민들의 정신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대북방송이 들리는 지역과 들리지 않는 지역이 있고, 같은 동네에서도 창문의 방향이 바다를 향한 지역에서는 대북방송이 잘 들리는데 비해 그렇게 하지 않은 쪽에서는 대북방송이 안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쪽과 들리지 않는 쪽의 집값이 두 배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는 대북방송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대북방송 가청권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우리 체제와 제도가 북한으로 확대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대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인도적 지원도 이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인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분배의 투명성과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분배의 투명성과 모니터링이 확보되지 못하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인도적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홍순직 : 통일이 남과 북의 온 민족이 함께 잘 살아갈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 얻기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변화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북중 접경지역의 조선족을 통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 얻기를 위해서는 당연히 분배의 투명성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하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2만 5000여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필요한데, 북한 인구 2500만명의 0.1% 밖에 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의 희망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의 권력층과 기득권층에게 통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를 보면서 통일이 되어 주민투표를 했을 때 과연 모든 북한 주민들과 권력층들이 남한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 정영태 : 북한 주민들은 봉건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북 지원이 있었고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교류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이 진행되면서 북한에 장마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국가의 배급기능이 살아나게 되었고, 장마당이 체제에 위협이 되니까 장마당을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장마당이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식량을 지원하는데 있어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가

루나 우유가루 등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식량 지원이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식량 지원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열** : 방향성 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군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로 가는 길은 북한의 핵 포기가 빠를수록 앞당겨질 것’ 이라고 말했듯이 ‘통일 대박’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3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평화토크 콘서트'

“분배의 투명성과 모니터링이 확보되지 못하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인도적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

■ **전봉근** : 북한 핵문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도 매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가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기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핵문제가 지난 25년간 풀리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이 문제가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과도적인 기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야 하지만, 한꺼번에 폐기시키는 것이 현 단계에서 무리라고 한다면 당분간 잠정적 유예기간을 두고 동결과 불능화의 기간을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이후 폐기하는 단계적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국과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최근에 북한의 경수로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수로도 북한 핵문제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력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원자로 폭탄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핵 테러 활용될 수 있는 핵안보 문제를 방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유호열** : 전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단 상태에 있는 6자회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을 재개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미국과 일본은 사전 조치를 해결한 다음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인데요.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서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핵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전봉근** : 사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비롯하여 6자회담의 합의가 있는 후에도 핵 실험을 하고 농축시설을 가동하는 등 지속적인 핵 무장과 핵 능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됐다.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와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없이 6자회담을 진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합의가 또다시 깨지게 되면 불신이 더욱 더 커지고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6자회담이 가장 유망한 틀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와 효력이 거의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나 대체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을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6자회담에 대한 기대수준은 과거와는 달리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의 핵무장론은 실현성과 합리성이 전혀 없어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은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이고, 에너지 빈국이며 원자력발전대국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위협이 실제적인 상황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든 차선의 방안으로 미국과 같이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 핵과 북한주민을 구분하는 정책 추진해야

■ **신창민**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트랙(Two-track)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진전에 북핵

문제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핵과 연계시켜 당근을 주는 방법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해 가면서도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내고 북한 주민들을 끌어 안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핵과 북한 주민을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유호열** :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에도 대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변국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변국과의 통일외교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고,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3월 26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4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 어린이가 헌화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의 경수로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수로도 북한 핵문제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력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 **남궁영** : 저는 대북정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자유·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것, 세 번째가 가능한 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북핵이 그렇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제적인 협조체제와 압력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능력의 강화를 억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도 통일한국에 대한 부담과 이득을 이미 확실하게 계산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와 혈맹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에 대해 협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도 통일한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이 친중국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통일되면 주한 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해지면서 동북아에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나빠

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통일과정

■ **정영태** : 저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통일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변화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변화할 것인지, 변화하지 않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을 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통일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과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군주체제와 같은 북한의 봉건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개막 연설을 했다.

제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바라는 것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중외교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변화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홍순직** : 통일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분단 극복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변국가들과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통일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FTA 확산을 통한 역내 무역 확대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확산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환경을 만들어야

■ **전봉근** : 통일외교와 관련하여 한가지는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동북아 상황을 보면, 각각의 국가들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략적인 신뢰관계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신뢰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할 것인지, 변화하지 않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을 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통일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국에 한반도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는 북한이 동북아의 경제와 안보의 블랙홀입니다. 북한이 알박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변국에 강조하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끌어당기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변 국가에 계속 퍼뜨린다면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궁영** : 북한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일종의 ‘알박기’와 같은 존재임을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즉, 동북아 지역을 재개발하고 바람직한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알박기’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알박기’의 해결은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경제 및 안보공동체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나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태** :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북한의 변화라는 것은 정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변화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뢰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게 됩니다. 대북 지원의 효과를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3월 11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통일대박'에 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국민통일공감대회를 개최했다.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정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변화는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지 말고 서서히 나아가야 하고,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유호열** : 오늘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통일 대박에 대한 우리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민주평통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민** : 예, 민주평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의 길을 명확히 직시하면서 선봉에서 직접 진두지휘

“통일 대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체 국민들이 합심해서 지원하고 힘을 모아주어야만 가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통일 대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체 국민들이 합심해서 지원하고 힘을 모아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힘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민주평통이 서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통일열차는 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저변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을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민주평통이 해야 합니다.

한인사회 통일역량 강화와 주류사회와의 네트워크 확대해야

■ **홍순직** : 민주평통은 국내 1만 6000명의 자문위원과 3000여명의 해외 자문위원들이 통일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통일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통일문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통일논의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하고, 해외에서는 현지 주류사회에 우리의 통일의지를 알리는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문위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인사회의 통일역량을 키우는 가운데 현지 주류사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일본해와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 마련’은 국제사회에서의 재외동포의 역할과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호열** : 오늘 통일대박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통일비용과 통일이득에 관해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통일대박의 내용에 무엇인지, 통일대박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통일대박을 이루는 데 꼭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좌담회를 보면서 우리가 통일논의를 확산해가는 데 있어 많은 쟁점들이 있다는 것과 이런 쟁점과 갈등요소를 해결하지 않고는 통일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고, 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통일Focus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관해 밝혔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의 연설문 전문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존경하는 한스 뮐러 슈타인하겐 총장님과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 그리고 드레스덴 공대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독일의 명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드레스덴은 구 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극복과 통합의 상징입니다. 독일 민족은 이곳 드레스덴을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하고,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드레스덴은 용기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드레스덴에서 하나 된 독일의 오늘과 분단 70년을 앞둔 한반도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교육은 ‘백년대



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를 둘러보며, 이곳이 바로 국가의 장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이 다리를 잇고, 교육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는 드레스덴 공대의 교육이념이 드레스덴 공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 구현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대학시절 전자공학을 공부한 공학도로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후 '미래창조과학부' 를 새로 만들고,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혁신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것이 창조경제입니다.

또한 드레스덴市과 같이 학교, 산업,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가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드레스덴市와 대학의 발전은 창조경제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독일은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7불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건너와 광부와 간호사로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려고 해도 동북아의 작은 나라,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 어느 나라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독일은 한국에게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를 제공하였고, 선진기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도움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2차 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기적을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독일의 철강산업을 보면서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를 놓고, 철강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가서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자,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고속도로 건설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반대에 부딪혔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제철소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고속도로는 이후 한국 경제성장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와 유통의 숨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지금 세계 5, 6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년 전 차관조차 받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독일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독일의 신뢰와 믿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청년 여러분!

독일인과 한국인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후 나라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들은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기 보다는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두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한국은 뒤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아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독일인들의 담대한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토록 높아 보였던 베를린 장벽도 동서독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막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 문화적 장벽’도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 이전 동서독 주민 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통일 직후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고 현재와 같이 통합된 독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 간의 만남 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70년입니다. 평생 아들 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가족들의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다가 작년에만 한국에서 3천 8백여 명의 이산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측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동서독은 이산가족 등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방문을 허용했고, 꾸준한 교류를 시행했습니다.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의 NGO 등의 동참, 그리고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 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그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는 길이며,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저는 곧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시민과 학생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왔습니다. 독일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듯이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진전이 동쪽 끝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의 교정에서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된 독일의 젊은이

들을 바라보면서,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엔 독일과 한반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라시아 열차로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에 독일인 친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진정한 친구 독일과 드레스덴 대학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1 취지

▶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

- 통일한국은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가 사라지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며 동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이바지하는 나라

▶ 통일을 위해 분단이 만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하며,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어울리는 진정한 ‘새로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기반구축 3대 제안」을 발표

2 추진방향

▶ 「평화통일 기반구축 3대 제안」은 교류협력의 목적이 남북관계 관리·발전만이 아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하며, ‘남북주민’, ‘공동발전’, ‘국제협력’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 드레스덴 공대 연설 중에서 —

① 남북한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교류협력

-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이 서로 접촉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장려하여 문화적·정서적 이질감을 극복
 - 특히,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과 교육 지원으로 한반도 통일 미래를 준비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UN과 함께 모자패키지(1,000days) 추진
- 역사 · 문화예술 · 스포츠 교류 장려
- 경제운용 · 금융, 조세 관리 교육
-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② 남북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류협력

- 기존의 일회적 · 일방적 물자지원 방식을 탈피, 교류협력의 전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동 발전을 도모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
- 남북이 함께 북한 지역의 농축산 및 산림을 개발하고, 신뢰형성에 따라 남한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북한은 남한에 지하자원 개발권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식을 확대 · 발전
 - －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 복합농촌단지 조성
 - 경제개발협력 등
-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③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교류협력

-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부터 북한 지역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남북한과 이웃국가, 국제기구 및 NGO 단체들이 함께 협력
- 北비핵화 결단 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에 적극 지원하고,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북한 및 동북아 경제 개발을 도모
 - 남 · 북 · 러 / 남 · 북 · 중 협력사업
 - DMZ세계평화공원
 - 동북아개발은행
 - 동북아안보협의체 추진 등

*인도지원 · 민생인프라 등 교류협력 전반의 국제협력 강조

표지설명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진행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히는 연설을 했다.



이 자료집은 한반도의 통일이 왜 ‘대박’ 인지를 살펴보고, 통일이 ‘대박’ 이 될 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그 실현방안과 추진과제에 관해 지난 3월 18일 개최된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일포커스 제6호

발행일 2014년 4월 14일
발행인 박찬봉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변인실 02)2250-2265
제작처 이호기획 02)2274-1491

※ 이 자료집에 정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Focu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